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시리즈 ⑨ 기업)

목 차

■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⑨ 기업)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기업 부문의 문제점	2
3. 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5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개 요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만성화되는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업 부문의 문제점

기업 부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점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순이익은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사업을 키우기보다 성장성은 희생하더라도 수익성은 방어하는 수비형 경영 전략 확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이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금액은 1990년대 후반 연평균 50억 달러 수준에서 2016년에는 3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해외를 투자처로 선택하고 있는 배경에는 규제개혁이 미진하고 비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생 기업의 부재이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창업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 제도 등으로 우리나라의 창업 활력이 매우 낮다. 또한 기업 성장 사다리 부재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기업 생태계가 작동을 멈춘 상황이다.

■ 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기업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할 비전은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이다.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부문의 3대 전략은 ①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②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③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이다.

(과제) 제시된 전략 중 ①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스탠다드'로라는 전

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전통 제조 부문의 자본축적 지속) 우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자본축적이 요구된다. (신성장 산업 발굴) 또한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유망한 신성장 부문을 발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감한 혁신)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기술혁신 방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기술혁신 과정의 유연성 제고)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선호 및 글로벌 기술 발전 수준을 추격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내 유연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이와 함께 기술혁신 과정을 보다 더 개방하여 창의적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국내외에서 선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 자원을 고도화해야 한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숙련도 제고) 즉, 융합의 시대에 부합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직업 교육으로 인력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여 사업 시행 및 연구개발 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형의 기업 자산을 전수해야 한다. (외국인 고급 인력 유입 확대) 이와 함께 외국인 인력 유치풀(pool) 다양화 및 체류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외국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혁신의 기반인 기업가 정신) 즉,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와 기회를 모색하는 진취적인 자세이다. 이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기업내 도전과 긍정의 ‘캔두이즘(Candoism)’ 확산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 및 기회라도 구체화, 현실화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창업 생태계 쇄신) 또한 기업인은 정보 및 지식의 공유와 협업이 창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망 확보를 통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넷째, 공정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기업내 준법 및 윤리경영 인식 제고) 그리고 기업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

해서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규제 선진화)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품질, 규제 개혁 과정에서의 민주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개혁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포지티브규제에서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네거티브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만 새로운 산업이 더 빨리 등장할 수 있다. 특히, 보건 및 의료서비스, 융합 관광서비스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해야 하는 유망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네거티브규제 전환이 시급하다. **여섯째, 산업 정책도 유연화해야 한다.** (산업 융합에 대비한 유연화된 지원) 즉, 제조와 서비스로 나눠보는 산업화 시대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융합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간 유연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일곱째, 소비자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우선 소비자의 주권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조화시켜야 한다. 미래의 소비자는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 성격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부문의 규제 강화) 또한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산업 재해 예방 등의 부문에서 기업 대내외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느슨한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해롭고 불량한 상품 및 서비스가 국내로 유입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략적 실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패러다임 측면의 보완)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윤과 함께 윤리도 중시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기업 내부에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 또한 사회 각 주체들과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림> 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 1.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
- 인적 자원 고도화
- 기업가 정신 고취

전략 2.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 규제 개혁
- 산업 정책의 유연화

전략 3.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

- 소비자 주권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1. 개요

-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면 최근 저하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시급
 - (기업경쟁력 결정 요인) 기업의 유형 및 무형 경쟁력을 결정짓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산업 기술 수준, 인적 자원, 금융 시스템, 물류 등 물리적 인프라, 기업 경영 활동 관련 법·제도 등
 - 유형 경쟁력은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적 성과로 나타남
 - 무형 경쟁력은 브랜드 이미지, 투명 경영, 조직 효율성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기업 활력 저하) 저성장 지속 및 만성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지연
 -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 GDP 갭률(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¹⁾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
 -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수는 2000년 12개에서 2010년 10개, 2015년 15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중은 3%에 불과
 - (연구의 필요성) 이에 저하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제안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는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 향후 전개될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산업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역량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1)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부문의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85조 원(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1월,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2. 기업 부문의 문제점

- 기업 부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는 활동 위축, 국외 탈출, 신생 기업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① 기업 활동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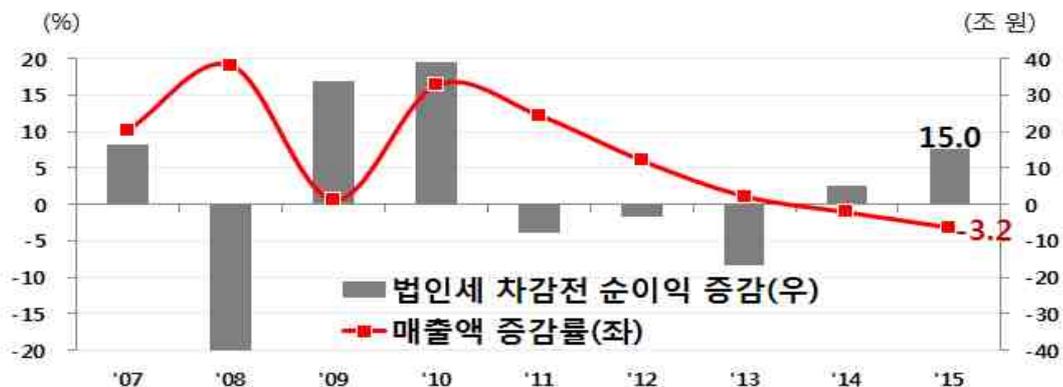
- 국내 기업들의 내핍 경영이 심화

-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2015년에 전년대비 3.2% 감소²⁾
- 이에 비해 201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15년에는 15조 원 증가폭을 기록

-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거나 사업을 키우기보다 성장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수익성은 방어하는 수비형 경영 전략 확산 때문으로 판단

- 2015년에 기업의 종사자가 증가했지만(7만 9천명), 이들 중 65%인 5만 1천명은 임시·일용직³⁾
- 또한 2015년의 국내 기업(금융보험업을 제외)의 연구개발비도 전년대비 10.1% 감소

<그림>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및 순이익증감



자료 : 통계청(기업활동조사).

주 1)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산업 대상.

2)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 통계청, 2016년 11월,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3) *ibid.*

② 기업의 국외 탈출

-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금액은 90년대 후반 연평균 50억 달러 수준에서 2016년말 35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국내 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투자처로 결정했던 배경에는 과거부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 규제개혁 미진 및 비경제적 비용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책은 1960년대 후반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0년대에 OECD 가입을 계기로 해외투자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었음
- 규제개혁이 미진한 원인은 이해 집단의 반발, 사회적 및 이념적 갈등,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등 다양함
-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기존규제 감축목표 설정, 미등록 규제 정비, 네거티브 시스템 및 일몰원칙 적용, 규제개혁 신문고 등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⁴⁾ 가시적 성과 부재

<그림> 해외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제도도입기 (1968~1979)	· 제한적 투자허용 · 사업계획 사전승인제 채택
제도정비기 (1980~1985)	· 자원개발 투자 확대(2차 석유파동) · 규제완화
규제완화기 (1986~1990)	· 해외투자 절차간소화(3저호황 무역흑자)
투자활성화기 (1991~1998)	· 대폭 규제완화(OECD 가입) · 해외투자 및 규제완화 주춤(IMF 외환위기)
민간주도기 (1999~2004)	·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 자유화조치
해외투자지원기 (2005~현재)	· 해외금융거래 규제완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김동연,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1호, pp.53~75.

③ 신생 기업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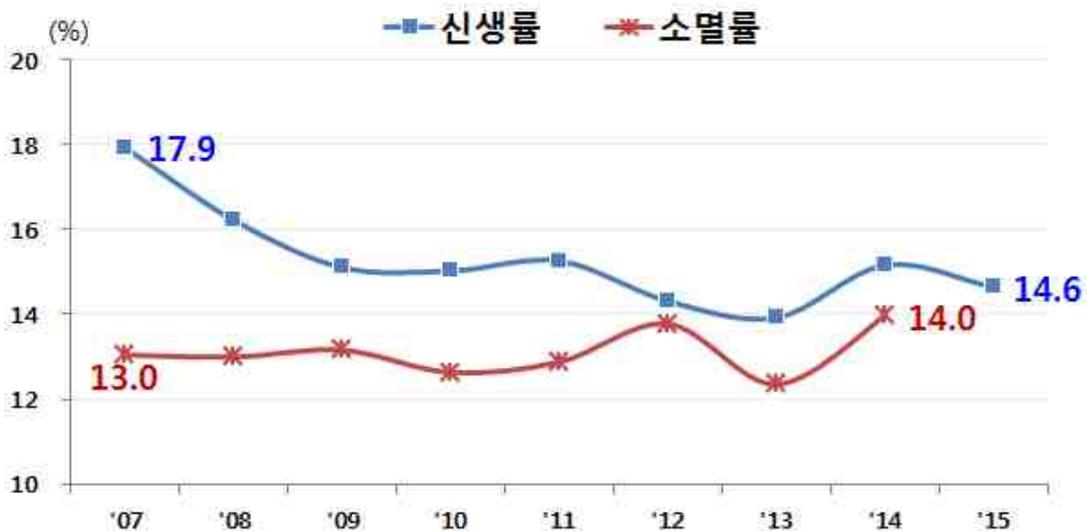
-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저조

-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창업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 제도, 창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창업 상담 부재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창업 활력이 매우 낮음⁵⁾
- 활동기업수 대비 신생기업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5년 14.6%로 축소

- 기업 성장 사다리 부재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함

- 중소기업은 기업가정신이 지속되고 기업가적 판단과 조직적 역량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 절감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

<그림> 국내 기업 생멸 추이



자료 : 통계청(기업생멸활동통계).

주 1) 신생률 =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2) 소멸률 =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5)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10월,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 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

3. 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그림> 기업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 1.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
- 인적 자원 고도화
- 기업가 정신 고취

전략 2.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 규제 개혁
- 산업 정책의 유연화

전략 3.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

- 소비자 주권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 기업 부문 비전: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업 부문 3대 전략

①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②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③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

□ 기업 부문 8대 과제

전략 1

한국 기업의 'K-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①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

- (전통 제조 부문의 자본축적 지속)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자본축적 요구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High-End) 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기업은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동시에 또한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 육성, 경쟁력 강화,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 우리 제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핵심기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에서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신성장 산업 발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유망한 신성장 부문을 발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하이엔드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
 -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투자를 원하는 기업일수록 시장 신뢰를 얻으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 스스로도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
 -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방향 설정’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보다 더 중점
 - 신성장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원천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 인증과 표준화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시 기존의 법과 제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 (과감한 혁신)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기술혁신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함
- 미래의 경제·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선제적으로 기술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혁신 시스템을 개선
 -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선점을 위해 새로운 사업 모델 구상
 - 기존 사업과 플랫폼 기반의 사업간의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익 창출, 비용 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방안을 도출
- (기술혁신 과정의 유연성 제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선호 및 글로벌 기술 발전 수준을 추격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내 유연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아이디어 창출, 채택,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된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 수렴 시 관리 중심의 비용 절감과 함께 기술 중심의 혁신성 제고에도 중점을 둔 의사 결정 시스템이 필요함
 -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필요한 시장·고객의 니즈 파악, 회사 내부의 기술 담당자의 혁신 제안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
 - 아이디어 채택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투입 여부 및 투입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기업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

- 성장도 고려한 진취적인 선정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함
-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성과 달성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축적
 -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 과정을 보다 더 개방하여 창의적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국내외에 선제적으로 확산
 -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은 개별 기업의 고립된 노력보다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내부 중심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우리나라 기술혁신 주체들간의 공식·비공식적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표준’⁶⁾을 선점하고 국내외로 확산

2 인적 자원 고도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숙련도 제고) 융합의 시대에 부합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직업 교육으로 인력의 숙련도를 높여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 역량 및 기초 연구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기업이 보유한 상용 가능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직업교육 과정은 정부와 학계, 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 방향의 이해, 최신 연구개발의 적용, 상용화로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음
- 연구 기관의 인적자원, 연구성과 및 지식이 기업으로 효과적으로 확산 및 상업화될 수 있도록 R&D 중개, 산학연협력지원 중개 등을 위한 산학연계·

6) ‘산업표준’은 그 표준의 설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적표준’은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기관에서 제정하는 표준을 의미함. ‘사실상 표준’은 산업계에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장경쟁의 결과에 의해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새로 정해지는 표준을 의미함(용어 해설 : 이재익·임채운·김왕동·김동규, 2003년, 「세계적 일류기업을 향한 기술혁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협력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정부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부문 확대
 - 또한 정부는 대학에 대해서는 산학연 협력으로 조달한 외부 재원에 대해 매칭펀드 및 연구기자재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
-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사업 시행 및 연구·개발 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형의 기업 자산을 전수
- 고령자가 기업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
 - 기업은 고령 인력 유지가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이라는 비용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성과 창출 중심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신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육체노동 및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닌 경륜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 및 컨설팅, 연구·개발, 사내 교육 직무 등의 업무를 배정
- (외국의 고급 인력 유입 확대) 외국인 인력 유치풀(pool) 다양화 및 체류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의 고급 인력 유입 확대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
-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간 인재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치풀(pool)을 확대
 - 해외거주 한국계 고급 인력 자원의 국내 연계 및 국내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교류활동 지원,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고용 활성화, 국책성 사업에 대한 해외 인력의 참여 등을 증대
 - 외국인 전문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및 신흥국 출신도 적극 유치
 - 초기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 확충, 비자 연장 절차 간소화, 영어 인프라 확충 등 외국인 인력의 체류 여건 개선

③ 기업가 정신 고취

-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와 기회를 모색하는 진취적인 자세이며,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 기업인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구성원이자 국가의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주도하는 주체
- (혁신의 기반) 기업내 도전과 긍정의 '칸두이즘(Candoism)' 확산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 및 기회라도 구체화 및 현실화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
 -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지고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내 분위기 확산
 -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칸두이즘'의 추진력은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의 역동적인 기업 혁신 기반이 될 수 있음
- (창업 생태계 쇄신) 기업인은 정보·지식의 공유 및 협업이 창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투자 인프라 개선 및 안전망 확보를 통해 창업을 지원
 - 현재의 창업 생태계는 폐쇄적인 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의 부재 등으로 아이디어 도출부터 자금 조달, 상업화 성공의 선순환 고리가 매우 약함
 - 태동 단계의 아이디어가 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인 스스로가 아이디어의 선점과 함께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술 부문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용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수 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벤처기업간 유기적 및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정책 금융 기관의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 기업인의 기술 및 경영능력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추진

전략 2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4]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
 - 변화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등 공정거래질서 부문 법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및 교섭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
 -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촉진하고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 경쟁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점을 인식
- (기업내 준법 및 윤리경영 인식 제고) 기업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
 - 기업의 경쟁 우위 창출 수단인 인재 개발 및 교육 과정에서 윤리경영이 기업의 최고 가치관임을 강조
 - 최고경영자의 경영마인드가 기업 문화의 방향을 좌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내 리더의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함
 - 윤리 경영의 시스템화를 위해서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보호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구비

5] 규제 개혁

- (전반적인 규제 선진화) 규제의 품질, 규제 개혁 과정에서의 민주화 등 전반적인 규제 개혁 선진화 추진

- 규제 개혁의 목표를 규제 개수의 감축이 아닌, 개혁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는지로 삼는 시스템 구축
-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진입을 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적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방식의 간접적 규제를 장려하는 ‘선진화된 규제시스템’ 도입
- 정부 중심의 규제 및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 및 규제개혁의 수혜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가 필요
- 규제의 신설 혹은 폐지 시 ‘비용-편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을 차용하여 규제 패키지 관련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갈등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해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함⁷⁾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금지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⁸⁾로 전환하여 신산업 등장을 촉진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융합신산업의 시장화와 비즈니스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필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
- 현행 성문법 체계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규제프리존을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임
- 일단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면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 분야를 먼저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사후에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운영의 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규제 감축을 위해 규제를 하나 만들면 최소 두개 이상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 인-투 아웃(1 in-2 out)’ 규제 감축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규제 패키지를 벤치마킹하여 규제 개혁에 걸림돌인 이해 당사자들간의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함.

8) 성문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여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임. 이에 비해 판례법 중심의 미국의 규제는 규제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임(용어 설명 : 전삼현 외, 2016년,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자유경제원).

-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관광서비스(의료+관광, 교육+관광 등) 등 유망서비스업에 투자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확대

⑥ 산업 정책의 유연화

- (산업 융합에 대비한 유연화된 지원) 제조와 서비스로 나눠보는 산업화 시대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고, 융합 관점에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원책 마련
- 국내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 강화
- 제조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개발부터 응용부문개발, 업종별 플랫폼 육성까지 종합적 육성 방안을 마련
-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핵심 요소에 대한 재정의의 한 후, 여기에 맞춰 그동안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지원해 왔던 핵심 요소들을 종합해 육성 지원
- 나아가 이들 기술 요소들을 결합해 제조업종별 응용 서비스를 시범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
-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간 유연한 협업 역시 필요하며, 협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전략 3 **건강한 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기업**

⑦ 소비자 주권 강화

-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의 주권간의 조화
- 경제적 약자임과 동시에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프로슈머 : prosumer)’의 성격을 지닌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 (상품·서비스의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 구매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혜택을 극대화
 - 정보화의 진전으로 발생하는 정보격차 현상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추진
 - 상품과 서비스 품질 테스트 및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며, 소비자 또한 상품에 대한 개선된 품질을 기업에 피드백할 수 있는 첫 단계임
 -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게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혼선이나 엇갈린 발표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
- (안전 부문의 규제 강화)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산업 재해 예방 등의 부문에서 기업 대내외 관련 안전 규제 강화
 - 느슨한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해롭고 불량한 상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높은 규제 장치를 마련
 - 상품서비스 제조 및 제공 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련 매뉴얼을 강화하여 기업의 영리 추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피해 예방
 -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산업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안전기술에의 투자 확대, 안전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
 -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현실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윤리 기준을 정립하여 신산업의 무리없는 발전을 도모

⑧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 및 전략적 실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⁹⁾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 시스템을 구축

- 사회공헌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전문 지식 및 정보를 보유한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관련 경험, 지식, 노하우 등을 축적
- 근본적으로는 기업 내부에 사회공헌활동의 준비과정부터, 실행, 사후 검토에 이르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
- 사회공헌활동이 시혜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하에 이를 위해 지출되는 투자비용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예산을 집행
- 기업은 모든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핵심 역량에 적합한 부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집중하고 경영마인드와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경영패러다임 측면의 보완) 기업의 윤리적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윤과 함께 윤리도 중시하는 경영패러다임의 보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사회공헌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내의 거부감 및 냉소주의 등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굳은 의지가 기업 내부에 확산되어야 함
- 경영진 내에 ‘사회공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 기부나 사적인 유대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및 법 준수와 같은 경제·법률적 영역을 벗어나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와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이며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환경 이니셔티브 및 이에 대한 의지임(용어 정의 : 이형준·서영진, 2004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 사회 각 주체들과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사회공헌활동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지원도 필요
- 기업, NGO 및 지방 자치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자선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재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넉넉한 기업과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선 활동의 수요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NGO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 결성 시 기업의 기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R&D, 인사조직 분야 등 필요한 모든 창구와 NGO간 상호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기업과 NGO간 상호 협력 증진이 배가됨 **HRI**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